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제 목 [논평] 강요와 종용에 의한 합의와 그 예정된 결과

날 짜 2015. 1. 20. (총 1 쪽)

## 논 평

### 강요와 종용에 의한 합의와 그 예정된 결과 재벌·대기업 만을 위해 일방통행하는 정책기조 폐기해야 한국노총의 915노사정합의 파기 선언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합의’의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박근혜 정권이 재벌·대기업의 민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다 직면한 파국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의 결정을 한국노총의 조직이기주의로 규정하며 한국노총 소속 개별 연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이에 숨기지 않는 박근혜 정권의 민낯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2015년 9월 15일 이전에도, 이후에도 대화를 찾을 수 없다. 정권의 강요와 종용에 의해 쓰여진 합의문은 애초에 실패한 합의였을 뿐이다.
2. 박근혜 정권은 ‘독자적으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권이 내세운 사회적 합의라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사라진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역사적인 대타협, 국민과의 약속, 운운하고 있지만, 이 정권이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면, 합의의 실패에 따라 ‘쉬운 해고’와 노동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신입사원마저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고 청년은 쪼개기계약에 고통받다 생을 포기하고 있다. 재벌·대기업만을 위해 일방통행하는 기존 정책기조의 폐기만이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끝.